

글. 박용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프로젝트 계획 수립지침



from Regions to the Global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프로젝트 사업의 기본방향은 크게 6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광역적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지방의 글로벌 경쟁거점 형성, 지역·기능·정책·구성주체·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적 계획 수립, 중앙부처-지자체 간 연계·협력 모델 창출,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고 소프트웨어형 사업을 우선 발굴, 광역 선도산업과 시·도 전략산업 간의 상생적 동반발전을 추진하는 것, 그리고 광역권 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 사업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 광역적 산업클러스터 형성으로 지방의 글로벌 경쟁거점 형성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경제권 형성을 통해 권역 내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 중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 거점 창출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재의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및 산업 규모로는 해외 광역경제권과의 경쟁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역경제권 사업은 선도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전략방향이다. 이를 통해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게 될 것이다. 기술개발 및 창업, 지역기업의 구조전환 및 고도화 등 내생적 전략의 낮은 성공 가능성 및 성과창출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기존의 지역사업에 비해 기업유치와 외자유치 비중을 강화하고 대·중소 기업 간 협력 프로그램을 강조하게 된다.

#### 통합적 사업계획 수립 :

##### 지역 · 기능 · 정책 · 구성주체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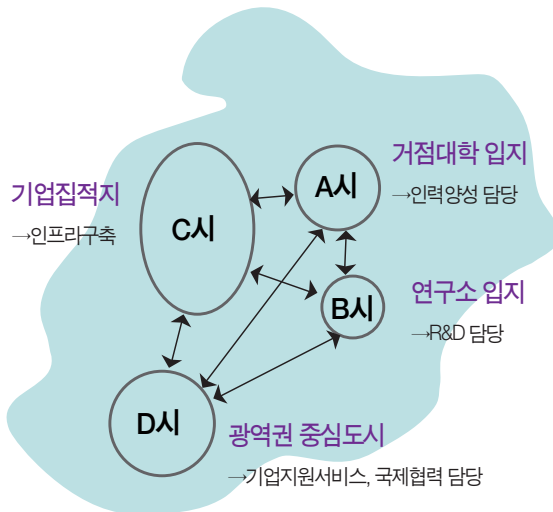
광역경제권 사업은 광역권 내 시·도별로 기능의 분담 및 연계체계를 형성하여 입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지역통합의 성격을 지닌다. 사업 기획은 해당사업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광역권 내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주체가 담당하며 시·도 기획 주체 간의 연계와 협력을 진작하여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통합적 성격을 확보하게 된다. 기획 주체의 전문성과 적합성 부문은 사업계획서 심사 시 평가기준으로 반영된다. 통합적 사업계획 내의 세부 기능별로 지역 내 공간분업구조를 구축하게 되는데 통합적 사업계획 프레임워크에 의해 도출된 프로젝트 세부사업에 대해 광역권

내 적절한 입지분업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각 세부사업별로 입지효율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 사업을 배치하거나 가장 역량이 우수한 추진주체를 선정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연구개발, 시험생산, 인증 및 평가, 시장진입 및 사업화, 생산, 물류 및 유통, 기업지원 등을 권역 내에서 통합하는 가치사슬상의 기능 통합도 광역경제권 사업계획의 핵심적인 추진방향이다. 또한 산업육성과 과학기술, 입지 및 인프라, 인력양성, 투자유치 등 관련정책의 통합적 접근도 광역권 사업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통합을 통해 이미 구축된 시설과 장비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선도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연관정책 패키지를 구상하게 되는데 선도산업 육성을 촉진하고 광역권 내·광역권 간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SOC 인프라 확충이나 선도산업 분야의 신규인력 양성 및 기존인력 재교육 등을 포함하는 지역거점대학 육성 등이 연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광역경제권 사업은 기존 지역산업 지원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시스템 통합자(SO: System Organizer)의 역할을 강화해서 클러스터 구성주체의 통합적 접

그림 2-1 ● 광역권 내 기능별 공간분업 구조(개념도)



- ▶ **선도산업 프로젝트**는 특화분야에 대해서 유망상품과 여기에 투입되는 핵심 부품소재, 그리고 상품과 부품소재에 필요한 핵심기술 등 3가지의 경쟁력 원천을 조화롭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 개념임
- ▶ **광역사업이 유망상품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시·도 전략산업이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임
- ▶ 단, 상품단위 뿐만 아니라 부품소재와 기술 등을 연계 육성한다는 취지로서 클러스터 구성주체 (VP:비전 제시자, SO:시스템 통합자, SS:전문기술 및 서비스 공급자)들을 골고루 조화롭게 육성한다는 취지

근을 시도한다. 시스템통합자는 권역 내 부품 소재 및 핵심 기술을 소유한 중소 벤처 기업을 엮어주는 통합 기업 또는 기관을 지칭한다.

### 중앙부처-지자체 간 연계 · 협력모델 창출

광역경제권 사업에서는 개별 부처 단위로 분리 ·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업을 광역 경제권을 중심으로 통합 운영하고 광역권 내 시 · 도간의 협력을 유도하게 된다. 통합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비 매칭을 최소화하고 국비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사업추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광역권 내 지자체와 산업체가 협력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지역주도의 사업계획 수립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추진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공동 참여하는 자율적 협력 모델을 지향하는 것이다.

- ▶ **광역선도산업 프로젝트는 광역권 단위로 글로벌 경쟁거점을 형성하는 것이 정책 목표**이며, 새롭게 시작하기 보다는 지역산업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투자된 인프라와 지원기관 등 지역혁신 역량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
- ▶ 따라서 **육성분야(특화분야)와 프로젝트의 지원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해서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기 투자된 결과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광역권 내 시 · 도 간 역할분담 및 연계성을 제고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중요
- ▶ 이러한 광역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사업기획이 필요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상세하게 작성해서 지역에 제시
- ▶ 가이드라인에는 광역사업의 위상 및 취지, 핵심 목적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과 목차, 포함 내용 등을 제시되어 있으나 경쟁력 원천도출, 세부사업의 선정이나 재원의 배분, 사업추진체계 구성 등은 지역 자율로 결정토록 하고 있음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특례 추진으로 육성대상 분야의 시장을 창출하고 시장진입을 활성화하는 전략도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강원권의 선도산업인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계정책으로 관광 의료 복합 리조트 개발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산지활용, 농지 전용 등)를 고려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호남권 선도산업인 LED 조명산업의 시장창출을 위해 특정 지구에 LED 조명의무 설치를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할 수도 있다.

연관 정책으로서의 SOC 확충, 거점대학 육성, 규제특례 등을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령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으로서 ‘지역특구’를 광역선도산업 규제특례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광역선도산업 규제완화특구(가칭)’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토지(농지 및 산지 등) 용도규제 완화, 지방세 감면 등 선도산업 분야의 시장진입 촉진방안이 제안될 수 있다. 기타 정부부처의 지원이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안을 하도록 유도하고 취합된 지원 또는 규제완화 요구사항에 대해 지역발전위원회, 지식경제부 차원에서 광역발전5개년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미 구축된 인프라의 활용과 소프트웨어형 사업의 우선 발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하드웨어에 대한 과투자 우려가 큰 상황에서 광역경제권 사업은 기(既) 구축된 하드웨어 및 인프라의 부가가치 및 활용도 제고에 주력하게 된다. 광역사업 기획 시 지역에서 이미 추진 중인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테크노파크 2단계사업 및 타 부처 사업 등과 연계성 및 차별성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연구개발, 기업지원, 기술이전, 사업화 투자연계, 마케팅, 경영지원, 시장정보제공, 인력양성 등 기 추진 중인 사업이나, 설립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국가전략산업 R&D와의 중복성을 감안하여 직접적인 제조 기술개발이 아닌 기업지원서비스, 인력양성, 마케팅, 브랜드화, 디자인, 국제협력 등 소프트웨어형(型) 고부가가치화 사업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 광역선도산업과 시·도 전략산업 간의 상생적 동반발전 추진

정책 취지에 있어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과 시·도 전략산업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광역경제권 사업은 비교우위를 갖춘 특화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글로벌 수준에서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시·도 전략산업은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산업 기반 확충에 목적을 두고 시·도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시·도 전략산업의 지원 범위는 배타적이지 않으며, 상호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시·도 단위의 전략산업은 지역별 산업발전 계획의 균등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만 세부 특화분야 수준에서 선도산업 프로젝트와 시·도 전략산업과의 중복 투자는 방지되어야 할 것이다.

▶ 시·도 전략산업육성과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은 사업목표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기본 원칙

- 시·도 전략산업 진흥사업은 지역산업 육성의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 R&D 및 기업지원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역산업 육성의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인 반면, 광역선도산업은 기 투자된 인프라와 기술개발 성과를 활용해서 민간 주도의 성과(유망상품) 창출을 중시하고 있음
- 따라서 광역사업의 정책대상은 유망상품(관련 부품소재 및 핵심기술 포함)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업들이 패키지 형태로 통합된 사업으로서 시·도 전략산업 진흥사업이 인프라, R&D, 인력양성, 기업지원서비스 등 기능별로 사업을 적절히 배분해서 추진하는 것이 차별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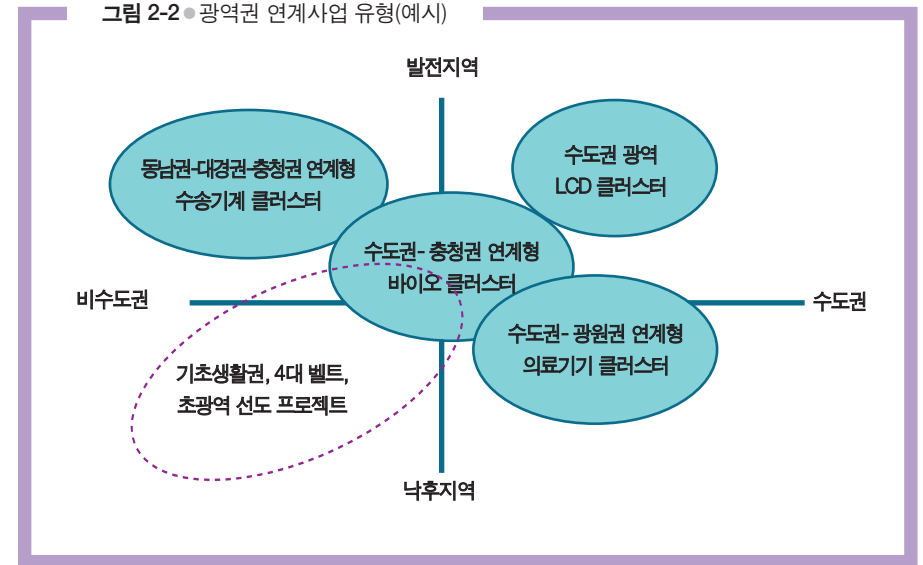
▶ 따라서 선도산업 육성 프로젝트와 시·도 전략산업과의 관계를 획일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관계 설정을 유도하고 있음

- 예를 들어 ① 전략산업 지원 성과를 활용한 상품화 연계형(전략산업 졸업형), ② 전략산업(인프라 투자)과 선도산업(상품화 기술개발)과의 기능 분담형, ③ 전략산업의 기능 확장형(특화분야 확장, 기술 융합 등) 등의 방법이 가능
- 단,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광역권 내 시·도 전략산업과의 직접적인 중복지원은 불가

## 광역권 간의 협력모델 구축

선도산업 특화분야가 광역권 간에 연계되어 집적되어 있거나 기능적으로 연계성이 높은 분야가 광역권 간 협력사업에 우선 해당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 및 강원권, 동남권과 대경권 연계 사업 등이 광역권 간 협력모델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이다. 클러스터 구성주체 중 일부 또는 가치사슬의 특정 기능을 초광역 또는 글로벌로 연계하는 방안 등도 포함된다.

그림 2-2 ● 광역권 연계사업 유형(예시)



## 사업계획 수립절차

광역경제권 사업계획 수립 이전에 먼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확정했다. 2008년 상반기에 지역 수요조사를 통해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선도산업 예시(안)가 발표됐으며 이후 광역경제권 내 시·도간 협의를 통해 선도산업 확정 절차를 거쳤다. 원칙적으로 시·도 합의 과정을 중시했으며 필요시 지경부는 조정역할 담당했다.

그림 2-3 ● 광역선도산업 선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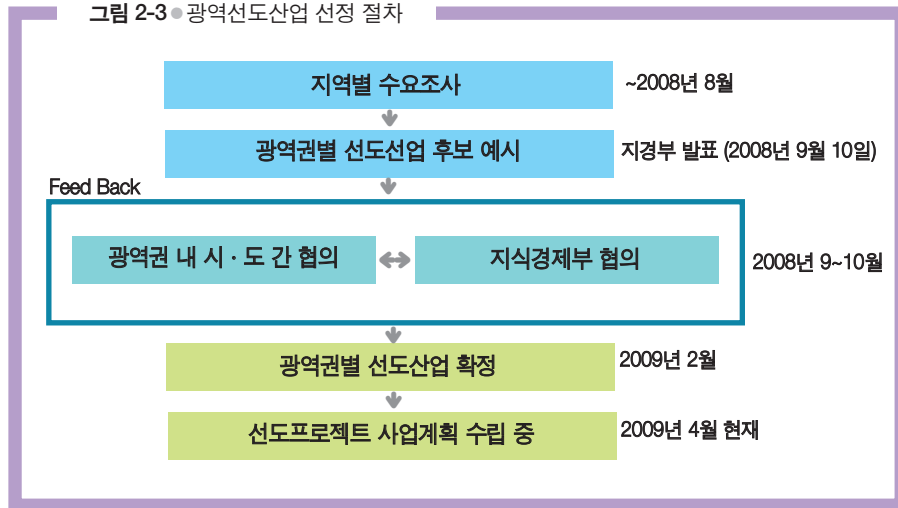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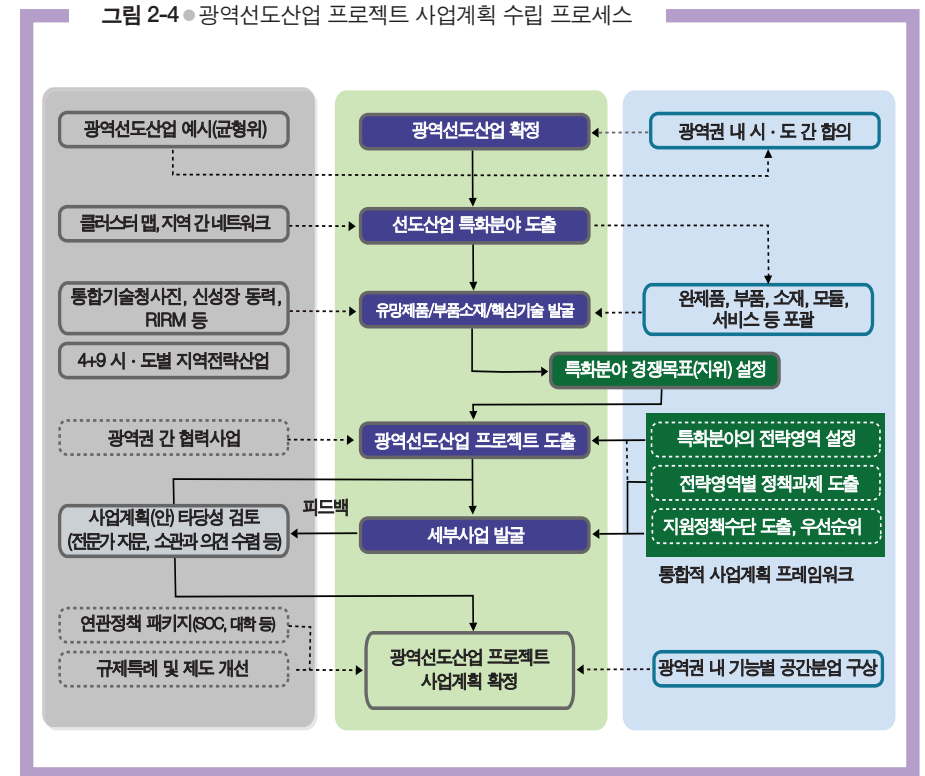


표 2-1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선정결과

| 광역권 | 선도산업     | 특화분야  |
|-----|----------|---|
| 충청권 | New IT   | 차세대 무선통신<br>반도체 (에너지 반도체)                         |
|     | 의약 바이오   | 의약바이오 플랫폼 활용 기업지원 서비스<br>의약품                      |
|     |          |   |
| 동남권 | 수송기계     | 해양 플랜트(해양에너지, 자원 플랜트)<br>그린 카 핵심부품 및 모듈부품         |
|     | 융합 부품 소재 |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기기<br>수송기계 안전편의 부품소재                  |
|     |          |   |
| 대경권 | 그린 에너지   | 태양전지 및 태양광 부품<br>수소 · 연료전지                        |
|     | IT융복합    | IT융합 실용로봇<br>IT융합 의료기기                            |
|     |          |   |
| 호남권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br>풍력   |
|     | 친환경 부품소재 | LED조명 및 광기반 해양조선 기자재<br>고효율 · 저공해 ·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
|     |          |   |
| 강원권 | 의료관광     | 동북아 지역에 특화된 의료서비스                                 |
|     | 의료융합     | 생활습관병 대응 심혈관 · 건강관리 · 면역질환                        |
| 제주권 | 물산업      | 제주형 물산업   |
|     | 관광레저     | MICE산업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프로젝트는 크게 5단계의 계획체계로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다. ① 지역 수요조사를 통해서 제시된 지역발전위원회 · 지경부의 선도산업 예시(안)를 기준으로 시 · 도간 합의를 거쳐 선도산업 확정, ② 클러스터 맵(map) 분석, 지식경제 통합 기술 청사진 등 지역 · 산업 분석과 국가산업기술정책 방향 등을 활용해서 선도산업 세부 특화분야 도출, ③ 특화분야 내에서 프로젝트 사업기간인 3~5년 내 육성목표로 삼을 수 있는 경쟁력 원천(유망상품, 부품소재(기능), 핵심기술) 발굴, ④ 도출된 경쟁력 원천에 대한 목표지위를 설정하고 현 지역상황을 분석해서 광역선도산업 프로젝트 도출, ⑤ 통합적 사업계획 프레임워크(전략영역 설정, 정책과제 도출, 지원정책 수단도출)에 따라 프로젝트의 세부사업 발굴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림 2-4 ● 광역선도산업 프로젝트 사업계획 수립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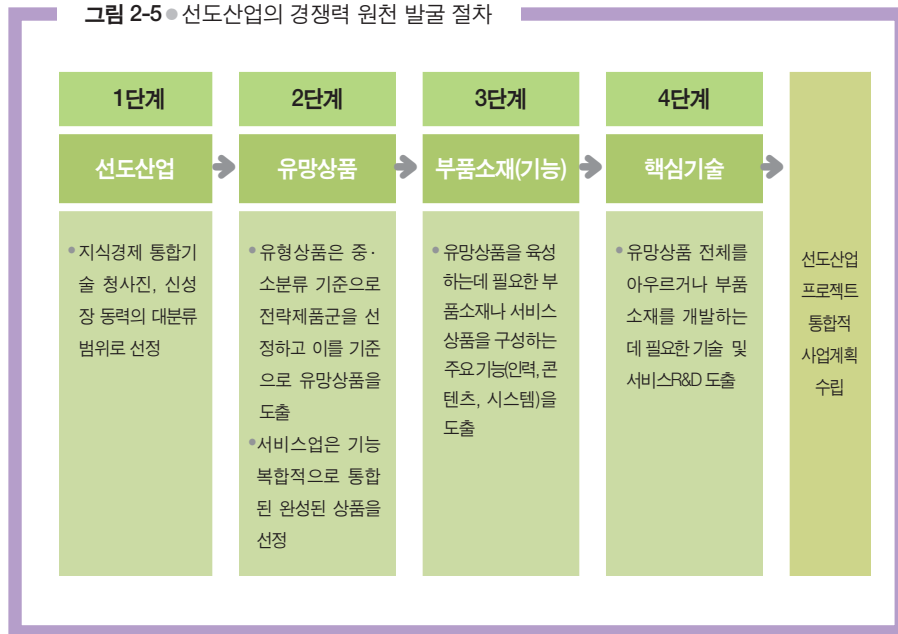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발전방향 설정

선도산업의 경쟁력 원천을 특화분야, 유망상품(서비스), 부품소재(기능), 핵심기술 등 4단계로 구분하고 특화분야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로서의 유망상품을 발굴하는 것이 선도산업 발전방향 설정의 핵심이다. 먼저 확정된 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화분야를 도출하고 특화분야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로서의 유망상품을 발굴하게 된다. 3년이라는 사업기간을 감안할 때 선택과 집중을 위한 선도산업의 세부육성 분야(특화분야) 설정은 불가피하다.

유망상품은 유형의 제품으로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완제품과 모듈부품 또는 무형의 서비스 상품이나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복합적 상품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유망상품에 투입 또는 활용되거나 유망상품 개발과 관련성이 높은 부품소재(기능)를 도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기술을 도출하는 과정이 이어진다.

그림 2-5 ● 선도산업의 경쟁력 원천 발굴 절차



선도산업 프로젝트의 사업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핵심기술개발 아이템은 유망상품 전체를 아우르는 기술이나 부품소재를 구현하기 위한 응용기술 및 상품화 기술 중심으로 선정되게 된다.

경쟁력 원천 발굴의 1단계는 선도산업 특화분야 도출이다.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도산업 육성의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화분야는 선도산업별로 2개로 선정하고 특화분야별로 프로젝트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즉, 선도산업 특화분야와 선도산업 프로젝트를 1:1로 매칭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선도산업 프로젝트가 통합적 계획이므로 특화분야별로 프로젝트를 입안하게 되면 해당 분야에서 유망상품, 부품소재(기능), 핵심기술(서비스R&D) 등 필요한 지원수단의 조합(패키지)이 가능하다. 특화분야는 클러스터 맵 분석, 지역산업 분석, 수요조사, 지역의 정책적 의지 등을 반영하되, '신성장 동력'과 '지식경제 통합기술 청사진'의 대분류 수준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선도산업 프로젝트는 3년 단위의 사업계획으로서 기 투자된 인프라를 활용해서 단기간에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이므로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
- ▶ 이를 위해 선도산업별로 2개씩의 특화분야를 선정해서(광역권별 선도산업이 2개이기 때문에 특화분야는 총 4개) 3년 단위 사업으로 추진
- ▶ 특화분야는 통합기술 청사진이나 신성장 동력의 대분류 수준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특화분야 내에서 유망상품은 개수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우려하는 사업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의견은 설득력이 부족

2단계는 유망상품의 선정이다. 신성장 동력과 통합기술 청사진의 중분류·소분류 수준을 참고하여 전략적 제품군을 도출하게 된다. 제조업의 유망상품은 전략적 제품군 중에서 개별 제품 및 모듈부품이며 서비스업의 경우는 수익구조를 확보하고

조기에 사업화가 가능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또는 서비스를 구성하는 제조업 기반의 핵심 제품이 해당된다. 선도산업별로 유망상품 수는 1~10개 정도에서 지역이 자율적으로 선정토록 하고 있다.

-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초기 단계의 연구개발부터 시작해서 시장에 출시하는 데 있어서 3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것이 사실임
- ▶ 그러나 선도산업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유망상품은 ①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상품의 개발뿐만 아니라 ② 기술개발이 끝난 상품화 단계에 있는 아이템의 시장 진입, ③ 기존 제품의 시장 확대, ④ 기존 상품의 업그레이드(기능개선, 기술융합 등)까지 포함하는 개념임
- ▶ 따라서 새로운 제품을 목표로 설정하더라도 ① 시·도 전략산업 진흥사업이나 기타 연구개발 사업 등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 ② 현재 상품에 투입되는 부품소재의 국산화, ③ 현재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품소재를 통합하는 제품개발 등 3년 내에 달성 가능한 다양한 육성 대상 및 전략을 설정 가능

유망상품 선정 시 선도산업의 가치사슬(관련업체 및 연관산업) 차원에서 높은 파급효과를 보유한 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치사슬이 소수 기업에 독점되지 않은 상품을 도출하여 정부 지원의 효과가 전 지역과 기업에 골고루 파급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즉, 가치사슬을 소수의 특정 기업이 독점하고 있어 해당 사업에 다양한 클러스터 구성주체들의 참여가 어려운 제품을 유망상품으로 선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유망상품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사업목표를 구현하면서도 권역 내 클러스터 구성주체 간 기능적 분업과 파급효과 분배가 가능한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산정 시 이러한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 ▶ 광역선도산업 프로젝트는 특화분야의 유망상품과 여기에 투입되는 핵심 부품소재, 그리고 상품과 부품소재에 필요한 핵심기술 등 3가지의 경쟁력 원천을 조화롭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 개념임
- ▶ 광역사업이 유망상품을 육성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시·도 전략산업이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임
- ▶ 단, 상품단위 뿐만 아니라 부품소재와 기술 등을 연계 육성한다는 취지로서 클러스터 구성주체(VP: 비전 제시자, SO: 시스템 통합자, SS: 전문기술 및 서비스 공급자)들을 골고루 조화롭게 육성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결코 소외되는 것이 아님

특정기업이 독자적으로 비즈니스 차원에서 개발하여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투자는 기업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나 국가경제나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전후방 연관, 대·중소기업 연계, 산학 연계, 고용창출효과 등)가 큰 상품에 대한 개발은 선도산업 프로젝트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선도산업의 유망상품은 시장 형성의 초기단계 또는 개별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개발과제 등에 지원의 초점을 둔다.

유망상품 도출 이후 부품소재(기능) 및 핵심기술(서비스R&D 포함)을 선정하는 것이 선도산업 발전방향 설정의 다음 단계이다. 부품소재와 핵심기술은 3년 이내에 실현가능한 것으로 갯수에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선정 가능하다. 단기간에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순수 및 기초기술 보다는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RIC사업 등 관련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응용 및 상품화에 초점을 뒀야 한다.

사업기간이 3~5년이라는 기간을 감안, 핵심기술은 유망상품 전체를 아우르는 기술이나 부품소재를 구현하기 위한 응용기술 및 상품화 기술을 중심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유망상품 개발에 필요한 부품소재(기능)와 핵심기술 역시 신성장 동력과 통합기술 청사진에서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되 광역권 내 수요조사 등을 반영하여 선정한다.

서비스업의 경우, 상품을 구성하는 핵심기능인 인력과 콘텐츠, 시스템 등을 부품·소재 단위에서 발굴하고 기술단위에서는 상품 개발 및 개선을 위한 서비스 R&D 활동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한다.

유망상품과 부품소재, 핵심기술 등 경쟁력 원천이 도출되면 선도산업 특화분야의 유망상품 단위에서 글로벌 경쟁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선정된 개별 유망상품에 대해, 글로벌 경쟁 지위를 현재와 목표 연도의 미래지표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설정된 목표는 세부사업계획 수립과 매칭시키고 추후 사업의 성과 평가 시 활용하게 된다. 프로젝트 사업기간에 맞춰서 3~5년 단위를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되 중장기 목표치는 자율적으로 제시 가능하다.

표 2-2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유망상품의 글로벌 경쟁력 목표(예시)

| 경쟁력 지표     | 현재<br>(2008) | 3년 후<br>(1단계) | 5년 후<br>(2단계) | 장기목표<br>(2015~) |
|------------|--------------|---------------|---------------|-----------------|
| 세계시장 점유율   | 5%           | 10%           | 15%           | 30%             |
| 국내생산액      | 90천억원        | 265천억원        | 450천억 원       | 600천억 원         |
| 수출         | 60억 달러       | 235억 달러       | 400억 달러       | 500억 달러         |
| 글로벌 핵심기업 수 | 5개           | 7개            | 10개           | 15개             |
| 관련기업 집적도   | 10%          | 15%           | 25%           | 40%             |
| 신규 고용창출    | 20,000명      | 40,000명       | 60,000명       | 80,000명         |
| 총 부가가치액    | 61천억 원       | 102천억 원       | 132천억 원       | 150천억 원         |

## 세부사업계획 수립 지침

### 전략영역 설정 : 핵심전략 영역, 관련전략 영역

전략영역은 선도산업 프로젝트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분야를 지칭한다. 투자예산 및 사업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클러스터 구성주체, 경쟁력 원천의 각각을 동일한 비중으로 모두 지원하거나 육성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지원해야 될 분야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략영역의 설정은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요자(기업) 지향적 접근’이라는 양대 축을 기본으로 한다. 경쟁력 제고는 선도산업 특화분야의 경쟁력 원천을 말하며 수요자 지향적 측면은 클러스터 구성주체, 특히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구상을 의미한다.

경쟁력 원천별·클러스터 구성주체의 관점에서 해당 광역권 선도산업(특화분야)의 전략적 지원영역을 설정하고 각 영역별 전략방향을 도출하게 된다. 가장 먼저 주력해야 될 분야는 핵심전략영역으로 설정하고, 그 외 핵심전략영역과 연관된 분야는 관련전략영역으로 구분한 다음에 각각의 전략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전략영역설정 시, 국가산업기술정책, 지역산업 지원성과, 지역산업 현황분석(광역권 클러스터 맵) 등의 분석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2-6 ● 통합적 사업계획 수립 프레임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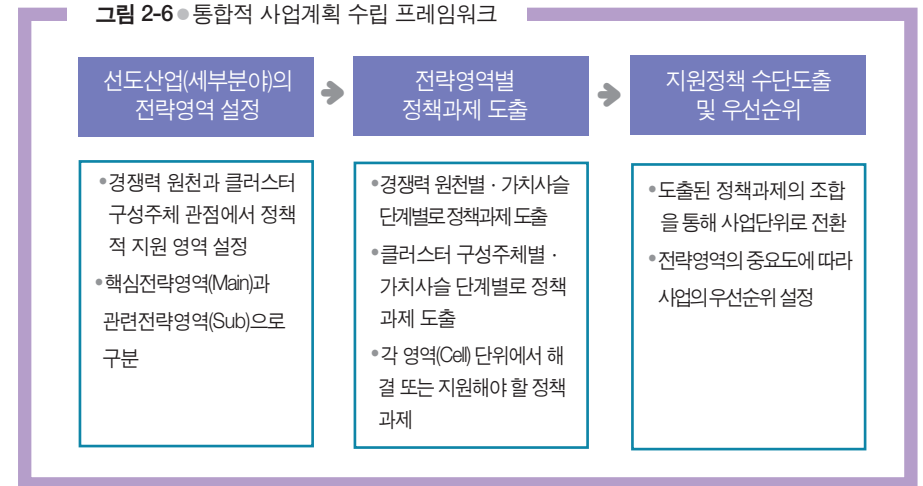


표 2-3 ● 선도산업(세부특화 분야) 육성을 위한 전략영역 설정(예시)

| 구성주체        | 경쟁력 원천 | 유망상품   | 부품소재(기능) | 핵심기술(서비스R&D) |
|-------------|--------|--------|----------|--------------|
| 비전 제시자(VP)  |        | 핵심전략영역 | ·        | ·            |
| 시스템 통합자(SO) |        | 핵심전략영역 | 핵심전략영역   | ·            |
| 전문 공급자(SS)  |        | 관련전략영역 | ·        | 관련전략영역       |

여기서 클러스터 구성주체는 산업별로 성공적인 클러스터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을 말한다. 성공적인 클러스터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바람직한 클러스터 구성주체는 비전 제시자(VP: Vision Provider), 시스템 통합자(SO: System Organizer), 전문기술 및 서비스 공급자(SS: Specialized Suppliers)로 구분된다.

비전 제시자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인재공급과 벤처 창업의 토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를 말한다. 대학 및 국책 연구소, 대기업 부설 연구소, 지역산업 지원총괄기관 등이 해당된다. 시스템 통합자는 원천기술을 상업화하고 요소기술과 부품을 통합하여 제품화하는 주체로서 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 해당된다. 한편 전문기술 및 서비스 공급자는 부품과 요소기술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금융·마케팅·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원서비스업체 등을 말한다. 전략영역 설정을 위해서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별로 이러한 클러스터 구성주체의 현황 및 역할, 강약점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취약한 분야에 집중적이고 우선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 경쟁력 원천별 · 가치사슬 단계별 정책과제 도출

전략영역을 설정한 다음에 정책수단 발굴을 위해 경쟁력 원천에 대해 가치사슬별로 요구되어지는 세부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게 된다. 정책과제는 핵심전략영역과 관련전략영역별로 전략방향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든 영역에 대해 정책과제를 도출할 필요는 없으며 핵심전략영역과 관련전략영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관건이다.

표 2-4 ● 경쟁력 원천별 · 가치사슬 단계별 정책과제 도출(양식)

| 가치사슬       | 경쟁력 원천 | 유망상품  | 부품소재(기능) | 핵심기술(서비스R&D) |
|------------|--------|-------|----------|--------------|
| 연구개발       |        | 정책과제1 | 정책과제2    | 정책과제3        |
| 인증, 시험, 평가 |        |       |          |              |
| 시험생산       |        |       |          |              |
| 시장진입, 사업화  |        |       |          |              |
| 생산         |        |       |          |              |
| 물류, 유통     |        |       |          |              |
| 마케팅, 국제협력  |        |       |          |              |
|            |        |       |          |              |

※ 가치사슬은 선도산업(특화분야)의 업종별로 달라질 수 있음

### 구성주체별 · 가치사슬 단계별 정책과제 도출

경쟁력 원천별 정책과제 도출과 동시에 각각의 클러스터 구성주체에 대해 가치사슬별로 요구되어지는 세부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쟁력 원천과 마찬가지로 핵심전략영역 및 관련전략영역별 전략방향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도출하게 된다. 이 역시 모든 영역에 대해 정책과제를 도출할 필요는 없으며 핵심전략영역과 관련전략영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2-5 ● 구성주체별 · 가치사슬 단계별 정책과제 도출(양식)

| 가치사슬       | 구성주체 | 비전 제시자(VP) | 시스템 통합자(SO) | 전문 공급자(SS) |
|------------|------|------------|-------------|------------|
| 연구개발       |      | 정책과제A      | 정책과제B       | 정책과제C      |
| 인증, 시험, 평가 |      |            |             |            |
| 시험생산       |      |            |             |            |
| 시장진입, 사업화  |      |            |             |            |
| 생산         |      |            |             |            |
| 물류, 유통     |      |            |             |            |
| 마케팅, 국제협력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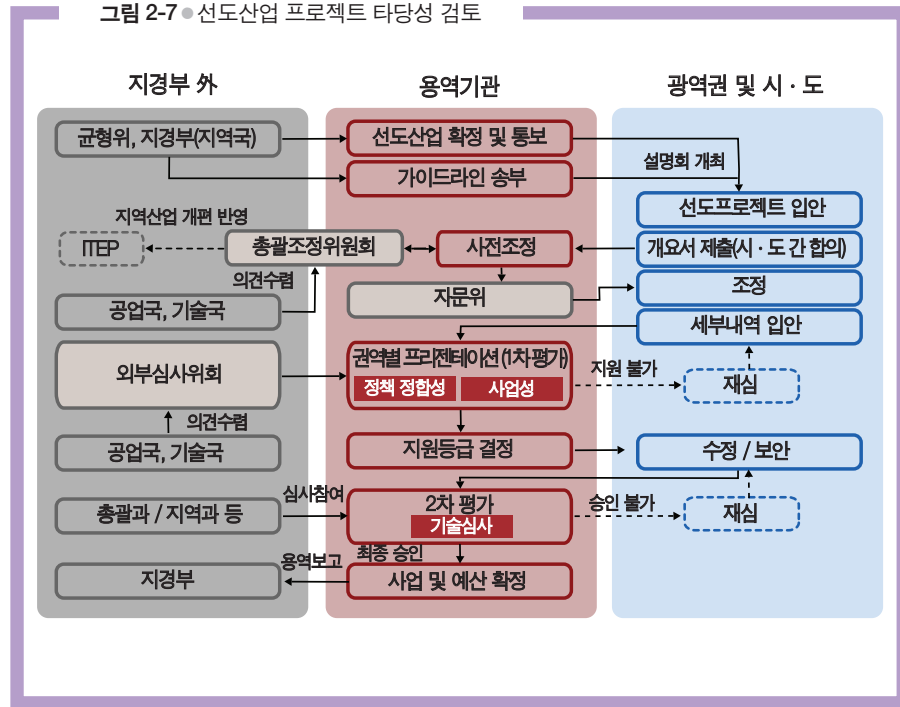
※ 가치사슬은 선도산업(특화분야)의 업종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지원정책 수단 도출 및 사업우선순위 산정

다음으로는 전 단계에서 도출된 정책과제를 선도 프로젝트의 사업단위로 전환하게 된다. 도출된 정책과제들을 재분류해서 유사한 과제는 통합하고 연계과제를 발굴하거나 추가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로 실행 가능한 사업단위로 전환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책과제1 + 정책과제2) + (정책과제B)를 합쳐서 세부사업 I 이 도출되는 방식이다. 여기서 전략영역의 중요도에 따라서 세부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게 된다.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선도산업 프로젝트의 예산 조정이 이루어지며 연차별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가 결정되기 때문에 전략영역의 중요도(핵심전략영역, 관련전략영역)를 반영해서 세부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2-7 ● 선도산업 프로젝트 타당성 검토



## 사업계획 평가기준 및 절차

선도산업 프로젝트별 사업계획서가 작성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심사평가위원회(가칭)를 구성해서 위원회 주도로 2단계에 걸친 사업심사 및 기술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필요시 정책 적합성 등을 검토할 총괄조정위원회(가칭)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한 심사위원회(가칭)를 두고 2단계 심사 방식을 추진할 수 있다. 정책 적합성(합목적성)과 사업성을 기준으로 개요서(사업계획서 구성 목차 1부)에 대한 1차 심사를 진행하여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평가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2차 심사는 사업의 최종 승인을 위한 기술심사로 진행하는 것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 및 국가정책과의 적합성, 중복방지 등을 위해 지식경제부 산업국 및 기술국의 정책적 소견을 타당성 검토 절차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기준에 관해서는 정량적, 정성적 지표를 구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광역경제권 사업의 취지나 선도산업 프로젝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경제부에서 작성하여 광역권에 배포된 사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기초로 정책 적합성, 내용적 타당성, 사업성 그리고 기술심사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항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책 적합성 부문은 크게 정책취지 구현 수준과 유관정책과의 적합성 등 2개의 세부 평가부문으로 구분된다. 정책취지 구현 수준 부문에서는 광역경제권 사업의 기본취지가 사업계획서에 충분하고 일관되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유관정책과의 적합성 부문은 국가산업기술정책과의 연계성 및 중복성, 이미 추진 중인 지역사업의 성과활용 정도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 된다.

사업계획서의 내용적 타당성 부문은 기획 및 내용의 타당성, 권역의 비교우위, 추진일정 및 추진체계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적절성 등의 세부 평가 부문으로 구분될 수 있다. 사업성 및 파급효과 부문은 선도산업 프로젝트의 육성 목표인 유망상품의 시장성과 지원으로 인한 산업적 파급효과 및 지역적 파급효과를 평가하게 된다.

표 2-6 ● 사업계획 평가항목(안)

| 평가부문       |                      | 주요 평가항목  |
|------------|----------------------|--|
| 정책<br>정합성  | 정책 취지<br>구현 수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젝트는 선도산업의 육성, 발전에 부합하는 대상과 범위로 입안되었는가?</li> <li>사업목표로 제시된 유망상품 개발은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되었는가?</li> <li>도출된 유망상품이 광역 차원의 협력을 유도하는데 적절한가?</li> <li>시·도간 기능적·공간적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li> <li>권역 내 비전 제시자, 시스템 통합자, 전문 공급자간의 역할이 명확히 드러나 있는가?</li> <li>사업은 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입안되었는가?</li> <li>필요시 초광역 수준에서의 사업연계와 협력이 시도되고 있는가?</li> </ul>   |
|            | 유관<br>정책과의<br>정합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성장 동력’, ‘지식경제 통합기술 청사진’ 등 유관 정책들에 기초한 경쟁력 원천이 발굴되었는가?</li> <li>유관사업들과의 중복성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가 사업계획서에 명확히 제시되고 있는가?</li> <li>기 추진된 유관사업들의 기반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li> </ul>  |
| 내용적<br>타당성 | 기획 및<br>내용의<br>타당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기획은 적절한 주체에 의해 입안되었는가?</li> <li>기획은 유관분야 전문가를 통한 협의와 검토가 반영되었는가?</li> <li>사업 기획에 있어서 기업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었는가?</li> <li>기획 과정에서 진행된 시·도간 협의와 합의가 정확히 반영되었는가?</li> <li>단위사업 및 정책수단이 사업목표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는가?</li> <li>인프라와 R&amp;D, 기업지원 등 유망상품 도출을 위해 적절한 유형의 사업들이 입안되었는가?</li> <li>각 단위사업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와 내용은 구현이 가능한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구성되었는가?</li> <li>모든 단위사업은 유망상품 도출에 부합하도록 기능적으로 정렬되어 있는가?</li> <li>프로젝트는 유망상품 양산을 위해 필요한 성과 이전 및 기업지원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가?</li> <li>WTO 협정, 특허권 등 사업은 유관 규약을 준수하며 성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가?</li> </ul> |
|            | 권역의<br>비교우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젝트는 권역의 산업 여건에 부합하는 목표와 내용으로 입안되었는가?</li> <li>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충분한 기업과 혁신기관이 입지하고 있는가?</li> </ul>  |
|            | 추진일정 및<br>체계의<br>타당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목표는 3년 후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되었는가?</li> <li>각 단위사업의 추진일정은 사업별 성과와 관계를 고려하여 입안되었는가?</li> <li>권역 내 추진체계는 사업 추진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었는가?</li> <li>연구개발사업 공모 시 적정 수준의 경쟁률을 유지할 수 있는가?</li> </ul>   |
|            | 자원배분의<br>적절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계획은 사업 내용에 부합하는 규모로 입안되었는가?</li> <li>단위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li> <li>특정 기업 또는 기관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지는 않은가?</li> </ul>   |

| 평가부문             |              | 주요 평가항목   |
|------------------|--------------|---|
| 사업성<br>및<br>파급효과 | 상품의<br>시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망상품은 해당 산업 내에서 비즈니스 성과 도출이 가능한 형태로 설정되었는가?</li> <li>유망상품의 국내외 시장에 대한 전망과 분석이 이루어졌는가?</li> <li>3년 후 유망상품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예상되는가?</li> </ul>   |
|                  | 파급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급효과 예측이 사업내용에 비추어 타당하게 도출되었는가?</li> <li>각 유망상품별 계량적 성과지표가 명확히 제시되고 있는가?</li> <li>성과 수준은 투자 자원 대비 충분한 사업성을 갖추고 있는가?</li> <li>사업 성과는 향후 광역적 협력 강화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인가?</li> </ul>  |
| 기술항목             | 예산편성의<br>적절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계획은 중앙정부 및 용역기관의 컨설팅 소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는가?</li> <li>프로젝트별,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은 합의된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li> <li>인프라 사업의 지방비 출연 비율은 적절한가?</li> <li>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민간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민자 출연이 이루어지고 있는가?</li> <li>국비를 통한 경상비 지원 수준은 적절한가?</li> </ul> |

마지막으로 기술심사 항목은 사업추진기간, 인프라 투자비 및 지방비와 민자 매칭비율 등 투자계획의 세부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이 중점 평가항목으로 사용된다.